



광남일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마중물 역할”
유병용 LH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7



노관규 순천시장, 대선공약 제안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등 18개 사업

9



해남, 물길 위판 1230억 ‘역대 최대’
8만3391t 생산...만호해역 이용 등 효과

10



‘5선발’ KIA 김도현, 철용성으로 우뚝 선다
토종 선발 시즌 첫승·QS 4회 등 맹활약

12

조간 제783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윤력 4월 11일)



‘사법리스크’ 떨어진 이재명...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없게”...6월18일로 변경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법’ 법사위 소위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3면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없애게 되고 대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일 연기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민주당은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오월 정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렸다

제4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상>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제45주년을 맞았다. 시민 저항과 연대·나눔의 ‘오월 정신’은 45년 만의 12·3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 정국 등을 계기로 되살아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불법 계엄에 맞섰던 오월 정신의 가치가 이번 헌정 위기를 막아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재조명됐다. 하지만 반백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여전하다. 이를 막고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 과제인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다. 이에 오월 정신을 민주 헌정사의 중요한 가치 규범으로서 국헌에 명문화 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뿌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5월은 오월 정신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퍼지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5·18민주화운동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관련기사 5·11·13면

△민주주의 뿌리 ‘오월 정신’
1979~1980년 신군부 세력이 ‘한국가 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둔 7일 오전 광주 북구 유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간부공무원들이 참배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12·3비상계엄·탄핵 정국 극복...‘5·18 정신’ 재조명 전국·세계화...“헌법 전문 수록만이 왜곡·폄훼 해결”

선포한 지 45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그녀의 비극과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의 물리적 출입을 막았다. 여기에 K1 기관총 등

으로 무장한 공수부대를 태운 헬기가 국회 내부에 진입, 국회 직원 및 보좌진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 위기 속에서 1980년 5월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서 싸운 광

주정신이 되살아났다.

네티어를 맨 회사원과 시장 상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시민 각계각층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거 거리로 뛰쳐나왔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연대를 통한 ‘희생, 나눔, 실천’으로 대표되는 광주 정신과 주먹밥 나눔 등 1980년 오월 정신이 재조명 받았다. ▶2면에 계속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광주 남북 연결 ‘BRT 조성’ 본격화

<간선급행버스>

시, ‘백운~매곡 노선’ 계획 수립
내년도 설계...2027년 개통 목표
교통혼잡 해소·대자보 도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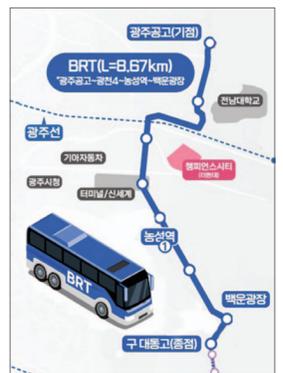
광주시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 계획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시는 7일 시청에서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광주 남북축에 신속성·정시성 등을 갖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에 반영된 광주 백운광장(옛 대동고)~농성역~광천사거리~경신역고~광주공고(8.67km)를 잇는 ‘백운~매곡 BRT’ 노선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총정거장은 8개로 구체적인 위치는 개발계획 수립 때 확정된다.

또 신규 노선도 추가로 발굴해 오는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행을 거쳐



북합쇼광물 ‘더현대 광주’가 개장하는 2028년 상반기까지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는 광주시, 시의회, 관할 자치구, 광주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연구원 등 교통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중호 광역교통과장은 “대자보 시대를 열어가고 시민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광주시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